

10.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☐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☐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☐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☐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7차 경제환경위원회(2020년 12월 16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운백 경제국장)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조 제6항에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고, 동법 제48조의3에 의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신설코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사항(안 제3조)
- 가축방역심의회 구성과 운영(안 제4조)
-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7조 및 제8조)
- 가축방역심의회 소집, 개의·의결 정족수, 의견청취 등(안 제9조)

-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기능(안 제13조)
-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(안 제14조)
-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소집, 개의·의결 정족수, 의견청취 등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적법성 여부

- 본 조례안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와,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두려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- 안 제2조(가축방역심의회)에서는 가축방역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가축방역심의회를 설치함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3조(심의회 기능)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심의대상을 열거하였음.
- 안 제4조(심의회 구성 및 운영)에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질병·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

직무대행에 대해 규정하였고,

- 안 제6조(위원의 임기)에서는 위원 임기와 연임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(위원의 해촉)과 안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에서는
위원의 해촉과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(심의회 회의)에서는 회의의 소집, 개의·의결 정족수,
의견청취,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(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)에서는 가축전염병 피해에
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장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
두는 것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13조(협의회의 기능)에서는 피해자 등의 피해보상요구가 있
는 경우 사전협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여
통보할 것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4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에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
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5조(협의회의 회의)에서는 회의의 소집, 개의·의결 정족수,
의견청취,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의 개정('15. 6월, '20. 2월)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고, 가축전염병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「대구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의해 구성·운영되던 가축방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'15. 6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의 개정 직후에 제정되었어야 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,
- 또한, 교통수단의 발달, 세계경제의 개방화·단일화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,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, 그 파급효과도 전국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

<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>

연 도	2016	2017	2018	2019
발생두수	271,171	386,503	1,396,294	1,621,909

(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)

- 향후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,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·지원사업·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*로의 개정(확대)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* 조례제정 지자체 : 경기, 강원, 경북, 경남, 충남, 전북, 전남, 제주, 광주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, 해당 농가의 재기 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임.	○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